

최근 인도의 금융부실화 방지대책과 전망

이정미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leejm@kiep.go.kr, Tel: 3460-1252)

송영철 아시아태평양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차 례 ● ● ●

1. 부실대출 확대 방지대책
2. 배경 및 원인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

- ▶ 인도 중앙은행은 2014년 1월 30일과 2월 26일에 걸쳐 △ 부실대출 관리·감독 강화 △ 구조조정 프로세스(restructuring process) 개선 △ 부실대출 매각 및 리파이낸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2014년 4월 1일 부로 이를 시행함.
 - 부실대출로의 전환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사전에 분류하고 관리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부실대출처리 규제도 완화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금융부실화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임.
- ▶ 이 정책은 최근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부실대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됨.
 - 2013년 3월 기준 3.4%였던 은행의 부실대출 비중이 같은 해 12월 기준 1.4%포인트 증가한 4.8%를 기록하면서 최근 9개월 동안 빠르게 증가함.
 - 전체 부실대출 중 국영은행의 비중은 2009년 3월 65%에서 점차 높아져 2013년 12월 83.5%까지 증가
 - 최근 부실대출 증가에는 △ 경제성장 둔화 지속 △ 고금리 지속 △ 인프라프로젝트 추진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 인도 중앙은행의 부실대출 감축정책은 부실대출을 조기에 파악·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단기적으로는 부실대출이 증가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은행의 자산관리능력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경기둔화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지연 기업실적 악화 등의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부실대출 규모도 단기적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인도중앙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자금지원, 개별 은행의 부실대출 처리 가속화, 인도 거시경제여건 개선 등으로 부실화 확대추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1. 부실대출 확대 방지대책

■ 인도 중앙은행은 2014년 1월 30일과 2월 26일에 걸쳐 상업은행 부실대출 감축을 위해 △ 관리·감독 강화 △ 구조조정 프로세스(restructuring process) 개선 △ 부실대출 매각 및 리파이낸싱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프레임워크를 발표하였으며, 이 프레임워크는 2014년 4월 1일부로 시행됨.¹⁾

(1) 사전적·사후적 부실대출 관리·감독 강화

- 시중은행의 신용 자료를 수집,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가진 CRILC(Central Repository of Information on Large Credits)를 설치하여 부실대출의 총체적 관리·감독을 강화
- 부실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특별관리대상(SMA: Special Mention Accounts)으로 분류하여 부실대출로 전환될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
 - SMA는 총 3단계로 30일 미만 연체 대출로 위험 징후가 있을 경우 SMA-0, 31일부터 60일까지의 연체는 SMA-1, 61일부터 90일 미만은 SMA-2로 분류하여 관리함.
- 또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신용평가 시스템 기반하에 시중은행이 규제를 위반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실대출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함.
- 특히 시중은행은 인프라프로젝트 대출에 대해 민감성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모기지론에 대한 관리 역시 보다 엄격하게 수행해야 함.

(2) 구조조정 프로세스(restructuring process) 개선 및 대손충당금 비율 상향조정

- CRILC에 SMA-2 부실대출이 보고될 때 은행들은 공동채권단(JLF: Joint Lender Forum)을 구성하여 부실대출에 대한 적시의 평가 및 의사결정 등이 수행되도록 함.
 - 총 부실대출 규모가 10억 루피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JLF를 구성해야 하며 10억 루피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구성할 수 있음.
 - 인도중앙은행은 JLF 구성과 개선계획(CAP: Collective Action Plan) 시행을 통해 공동으로 부실대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적 부실대출 관리를 바탕으로 부실기업의 회생을 유도하여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둠.
- 공동채권단은 개선계획을 통해 시중은행이 부실대출에 대한 평가를 ① Rectification ② Restructuring ③ Recovery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조기에 실현가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함.
 - Rectification은 부실위험이 높은 대출이 부실대출 카테고리로 전환되지 않도록 채권자와 채무자 간 상환기

1) 중앙은행은 2014년 1월 30일 'Early Recognition of Financial Distress, Prompt Steps for Resolution and Fair Recovery for Lenders: Framework for Revitalising Distressed Assets in the Economy'에 이어 2014년 2월 26일 'Framework for Revitalising Distressed Assets in the Economy-Guidelines on Joint Leaders' Forum(JLF) and Corrective Action Plan(CAP)'과 'Framework for Revitalising Distressed Assets in the Economy -Refinancing of Project Loans, Sale of NPA and Other Regulatory Measures' 등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함.

간 조정, 재융자 등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임.

- Restructuring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보다 엄격한 법률적 제도 안에서 대출상환을 약속하는 단계로 채무자가 JLF의 허가 없이 자산을 처분하거나 양자간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Recovery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음.
- Recovery는 앞선 두 단계가 실현가능하지 않을 경우에 선택하는 단계로 JLF 구성 채권단의 대출금액 기준, 채권자 수 기준 각각 75%, 60% 이상의 동의하에 부실채권 회수가 진행됨.
- 한편 중앙은행은 대출은행이 특별관리대상 및 부실대출 개선계획을 CRILC에 보고하지 못한 채 부실대출이 된 경우 이에 대한 충당금(Provision)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손실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함.

표 1. 부실대출 대손충당금 변동

부실 분류	대출금 연체 기간	충당금 비율(%) 변동
고정(sub-standard): 담보	3개월 ~ 6개월	15
	6개월 ~ 1년	15 → 25
고정(sub-standard): 무담보	3개월 ~ 6개월	25(인프라론의 경우 20) → 25
	6개월 ~ 1년	25(인프라론의 경우 20) → 40
회수의문 I (doubtful I)	2년	담보: 25 → 40
		무담보: 100
회수의문 II (doubtful II)	3년, 4년	담보: 40 → 100
		무담보: 100
회수의문 III (doubtful III)	5년 이상	100

주: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로 고정(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손실(loss)로 분류됨.

자료: RBI(2014. 1. 30), "Early Recognition of Financial Distress, Prompt Steps for Resolution and Fair Recovery for Lenders: Framework for Revitalising Distressed Assets in the Economy," p. 13.

(3) 프로젝트론 리파이낸싱 조건 및 부실대출 처리 규제완화

-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의 프로젝트론 재금융(project loan refinancing) 시 대출금상환조건 변경이 있어도 'restructuring'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함.
- 2015년 4월 1일부터는 상환시기 및 금액, 이자조건 등이 변경될 경우 구조조정된 계좌(restructured account)로 인식하여 은행의 부실대출로 분류할 예정²⁾이나 프로젝트론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함.
- 또한 자산유동화(SC: Securitisation Company) 및 구조조정전문회사(RC: Reconstruction Company)를 통한 부실대출 처리 조건을 완화하여 은행들이 보다 유연하게 부실대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과거에는 부실대출로 확정된 경우에만 SC/RC에 판매가 가능했으나 SMA-2 단계에서도 판매를 허용함.
- 은행간 부실대출 판매/구입 시 최소 보유기간 한도를 완화하여 부실대출 거래를 활성화하도록 함.
- 은행간 부실대출 거래의 경우 최소 보유기간을 기존 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함.

2) "RBI tightens loan restructuring norms; raises provision to 5%," *The Economic Times*(May 30, 2013).

표 2. 프로젝트론 재금융 조건 및 부실대출 처리 규제완화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프로젝트론 리파이낸싱 완화	• 시중은행이 프로젝트론에 대해 재금융(리파이낸싱) 시 'restructuring'으로 미분류
부실대출 조기 처리	• SMA-2 단계의 부실대출도 SC, RC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은행들의 부실대출을 조기에 처리하도록 유도
은행간 부실대출 거래 규제완화	• 타 은행으로 부실대출 거래 시 최소 보유기간 한도 완화

자료: RBI(2014. 2. 26), "Framework for Revitalising Distressed Assets in the Economy – Refinancing of Project Loans Sale of NPA and Other Regulatory Measures," pp. 1-5.

■ 한편 3월 21일 인도 중앙은행은 비은행금융기관(NBFC: Non Banking Financial Companies)을 대상으로 한 프레임워크를 추가적으로 발표

- 이 프레임워크는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감축방안과 대체로 유사하나, 은행과 NBFC의 부실채권 기준이 상이한바, NBFC에는 별도의 프레임워크가 적용됨.

표 3. NBFC 부실대출 감축방안

구분	주요 내용
사전적·사후적 부실자산 관리·감독 강화	• CRILC에 분기마다 보고 • SMA로 분류 및 사전 관리(SMA-2단계는 91~180일까지임.) • 규제 강화
구조조정 프로세스 개선 및 충당금 비율 조정	• JLF 구성 및 CAP 수행 • SMA 단계에서 CRILC에 보고되지 못한 채 부실채권이 된 경우, 일부 충당금이 부실채권의 25~100% 수준(기존 10~50%)으로 상향됨.
부실대출 처리 규제완화	• 부실대출 거래 시 최소 보유기간 한도 완화(15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

자료: RBI(2014. 3. 21), "Early Recognition of Financial Distress, Prompt Steps for Resolution and Fair Recovery for Lenders: Framework for Revitalising Distressed Assets in the Economy," pp. 1-7.

2. 배경 및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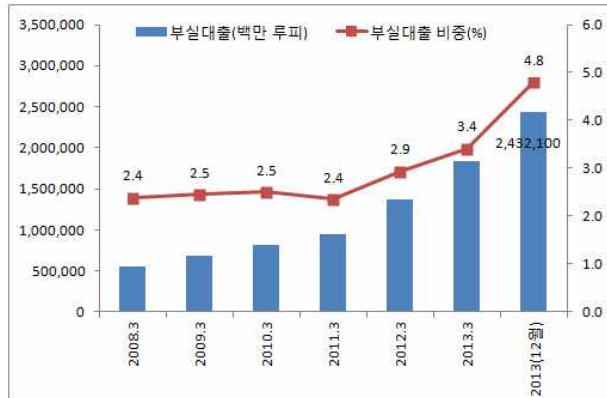
■ 인도 중앙은행의 부실대출 방지대책은 최근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대응책임.

- 2013년 3월 기준 3.4%였던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비중이 같은 해 12월 기준 1.4%포인트 증가한 4.8%를 기록하면서 최근 9개월 동안 빠르게 증가함.³⁾

3) 국영, 민간, 외국계 상업은행을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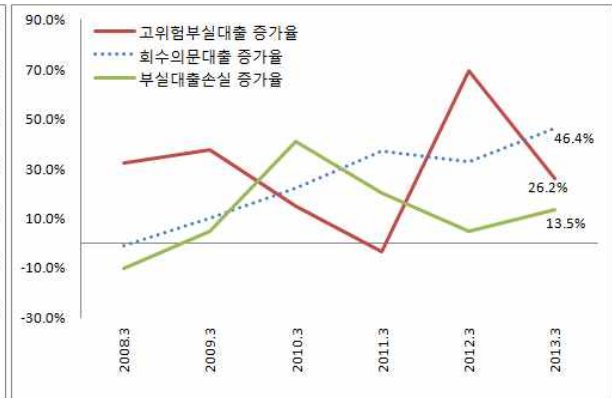
- 고위험 및 회수의문 대출의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향후 은행의 부실대출로 인한 손실이 확대될 위험이 있음.⁴⁾

그림 1. 상업은행 부실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자료: CEIC, 언론자료 발표 데이터 종합.

그림 2. 상업은행 부실대출의 유형별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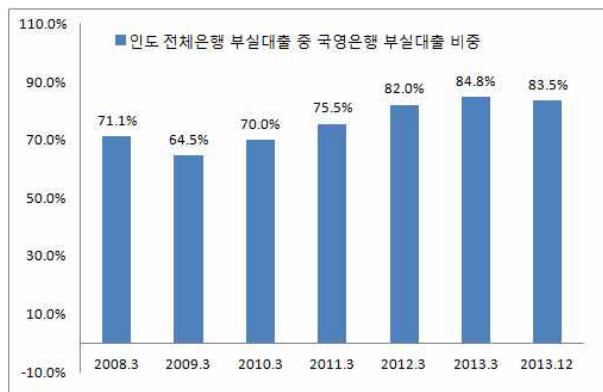


자료: CEIC.

- 특히 전체 상업은행 부실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영은행의 대출 부실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인도 전체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규모 확대를 주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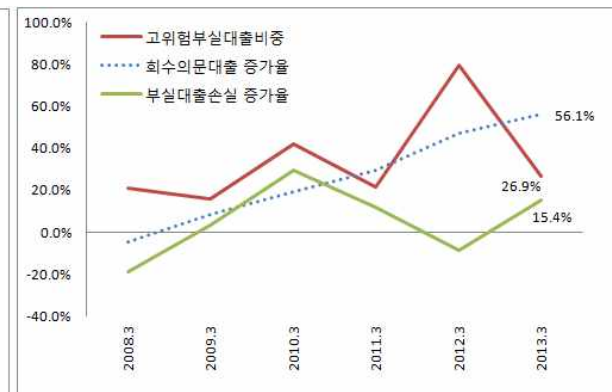
- 전체 부실대출 중 국영은행의 비중은 2009년 3월 65%에서 점차 높아져 2013년 12월 기준 83.5%까지 증가

그림 3. 국영은행 부실대출 비중 추이



자료: CEIC, 언론자료발표 데이터 종합.

그림 4. 국영은행 부실대출 증가율 추이



자료: CEIC.

- 인도 최대 상업은행인 SBI(State Bank of India)의 2013년 12월 기준 부실대출 규모는 약 6,700억 루피(약 111억 달러)로 3월 대비 32.5% 증가하여 부실대출 비중이 같은 기간 약 4.8%에서 약 5.7%로 증가⁵⁾
- 한편 UBI(United Bank of India)의 경우, 부실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같은 기간 부실대출 규모가 187% 급증하여 현재 중앙은행의 관리하에 대출규제를 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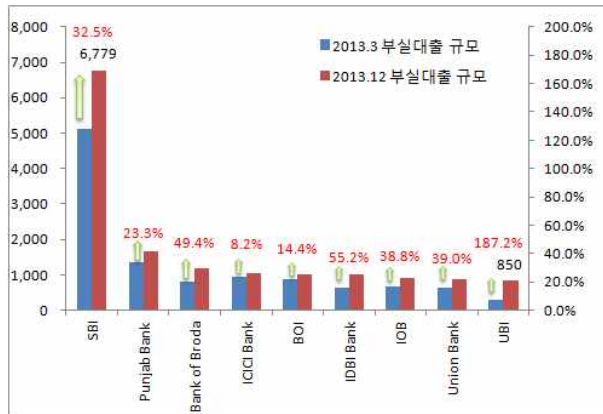
4) 부실대출은 고위험(sub-standard), 회수의문(doubtful), 손실(loss)로 구분되며 고위험은 이자 연체기간이 3개월~1년, 회수의문은 1년 이상임.

5) "India's Bad Loan Problem Worsens, Up 35% In Just 9 Months," *Indiaspend*(February 21, 2014).

- 2013년 12월 기준 부실대출 비중이 5% 이상인 국영은행은 총 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⁶⁾

그림 5. 주요 상업은행별 부실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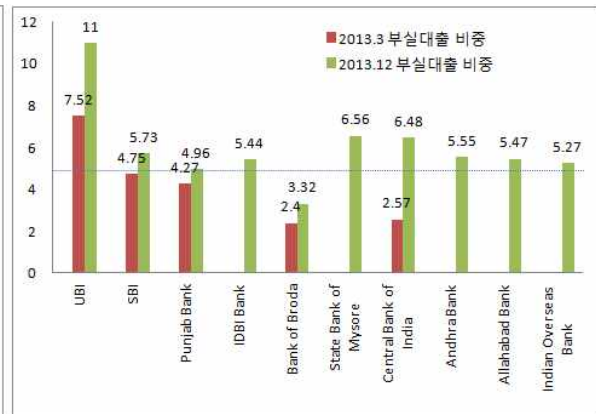
(단위: 억 루피, %)



자료: 언론자료 종합.

그림 6. 주요 국영은행별 부실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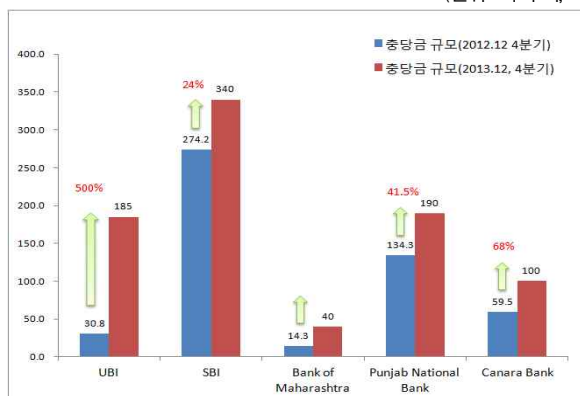
자료: 언론자료 종합.

- 한편 부실대출 증가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이 확대되면서 수익성도 악화됨.

- UBI는 부실대출 증가로 전년동기대비 약 500% 증가한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2013년 3/4 분기(7~9월) 482억 루피(약 8.4억 달러)에 이어 4/4 분기(10~12월)에도 약 123억 루피(약 2.8억 달러)의 순손실을 입음.⁷⁾
- SBI 역시 부실대출 증가로 대손충당금 규모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한 약 340억 루피로 확대되어 2013년 4/4분기(10~12월) 순이익이 전년대비 34% 감소한 약 220억 루피(3.6억 달러)에 그침.⁸⁾

그림 7. 주요 국영은행의 대손충당금 증가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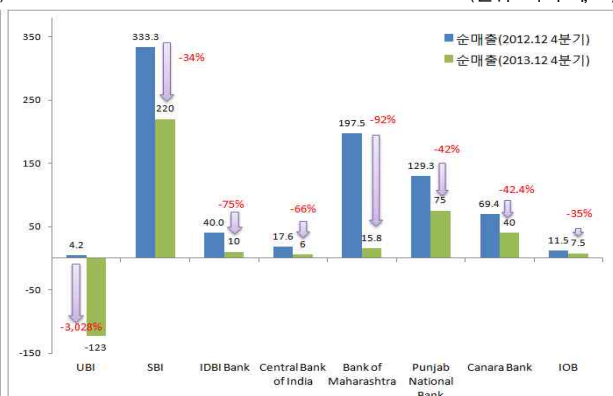
(단위: 억 루피, %)



자료: 언론자료 종합.

그림 8. 주요 국영은행의 순이익 동향

(단위: 억 루피, %)



자료: 언론자료 종합.

6) "How bad are bad assets of banks?" *Livemint*(February 9, 2014).

7) "UBI reports Rs 1,238-cr loss," *Business Standard*(February 8, 2014).

8) "NPA, pension provision, gilt losses pull SBI profit down 34 pc," *Business Standard*(February 14,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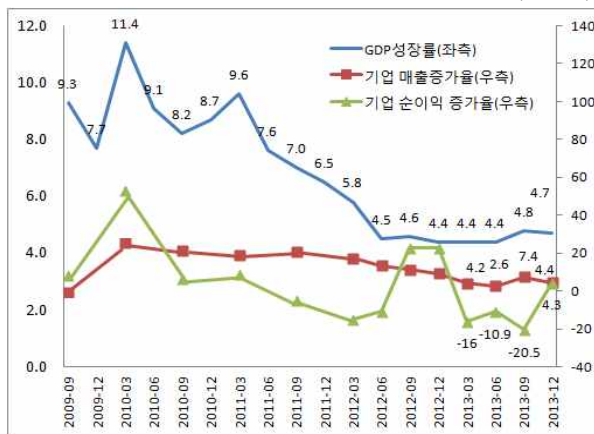
- 최근 인도 상업은행의 부실대출 확대에는 △ 경제성장 둔화 지속 △ 고금리 지속 △ 인프라프로젝트 추진 지연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 경제성장 둔화 지속

- 2012년 6월 이후 최근까지 인도 경제는 7분기 연속 5% 이하의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실적이 최근까지 악화됨.
- 경기둔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 이후 인도 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3분기 연속 기업 순이익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 특히 제조업부문의 경우 2013년 10~12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산업생산 증가율 둔화를 주도함.

그림 9. 최근 인도 GDP 성장률 및 기업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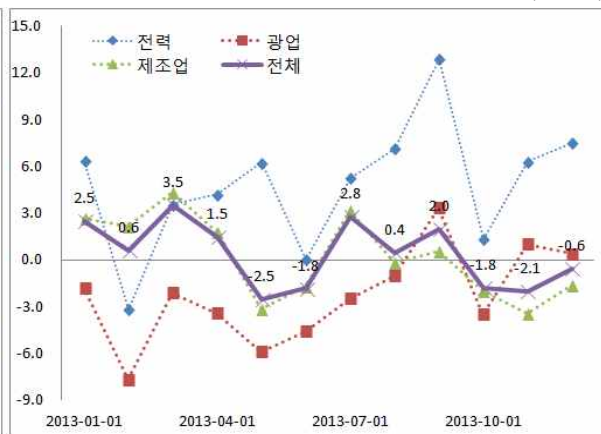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RBI.

그림 10. 최근 인도 산업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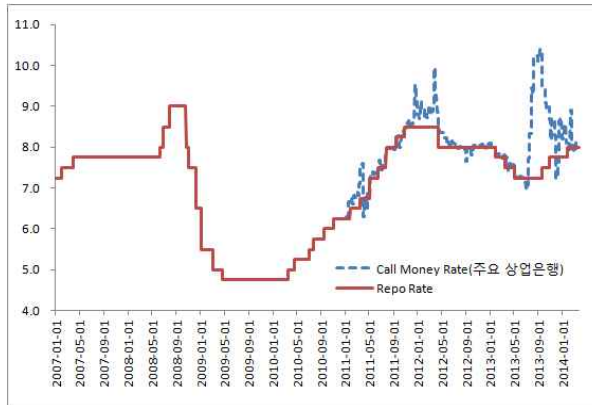
자료: CEIC.

(2) 고금리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상승

-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 상승으로 시중은행의 부실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인도 기준금리는 2014년 4월 현재 8%로 2011년 4월 이후 7% 이상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0년 3월 이후 3.25%포인트 증가한 수준임.
- 한편 주요 상업은행의 콜금리는 2014년 3월 기준 8.2%로 2011년 1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주요 상업은행의 우대대출금리(prime rate)는 평균 16.5%로 저점이었던 2010년 7월 대비 2.8%포인트 상승함.

그림 10. 기준금리 및 콜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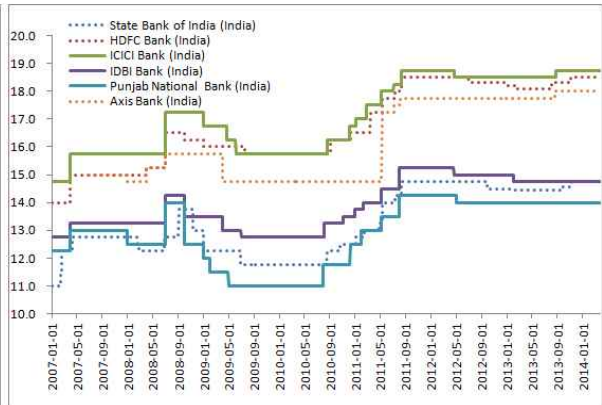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CEIC.

그림 11. 주요 상업은행 우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CEIC.

(3) 인프라프로젝트 추진 지연

- 행정지연, 환경문제, 토지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인프라프로젝트의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대출 상환 변동성을 확대시켜 은행의 부실대출 부담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
- 15억 루피(약 2,4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인프라프로젝트의 지연비중은 2012년 12월 48%, 2013년 6월 49%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 12월에는 3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임.⁹⁾
- 이에 따라 2013년 1월~2014년 1월 인프라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의 6.2%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2.6%로 위축되었음.

표 4. 인프라프로젝트 지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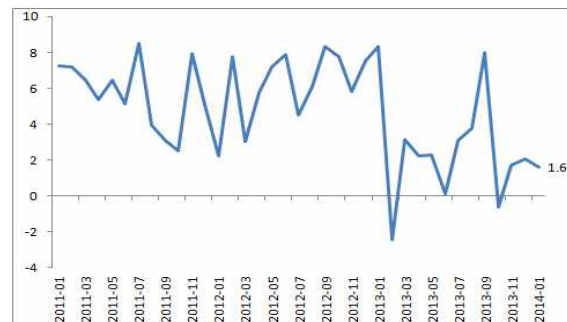
(단위: 개, %)

	진행 프로젝트	지연 프로젝트	지연 비중
2013.12.01	739	231	31
2013.06.01	569	277	49
2012.12.01	566	270	48

주: 15억 루피 이상의 프로젝트 대상.
자료: 언론자료 종합.

그림 12. 인프라 인덱스 증가율

(단위: %)



주: 인프라 산업 생산지수로 전기, 석탄, 시멘트 등을 포함.
자료: CEIC.

9) "Over 30% infra projects delayed: Jena," *Business Standard*(February 21,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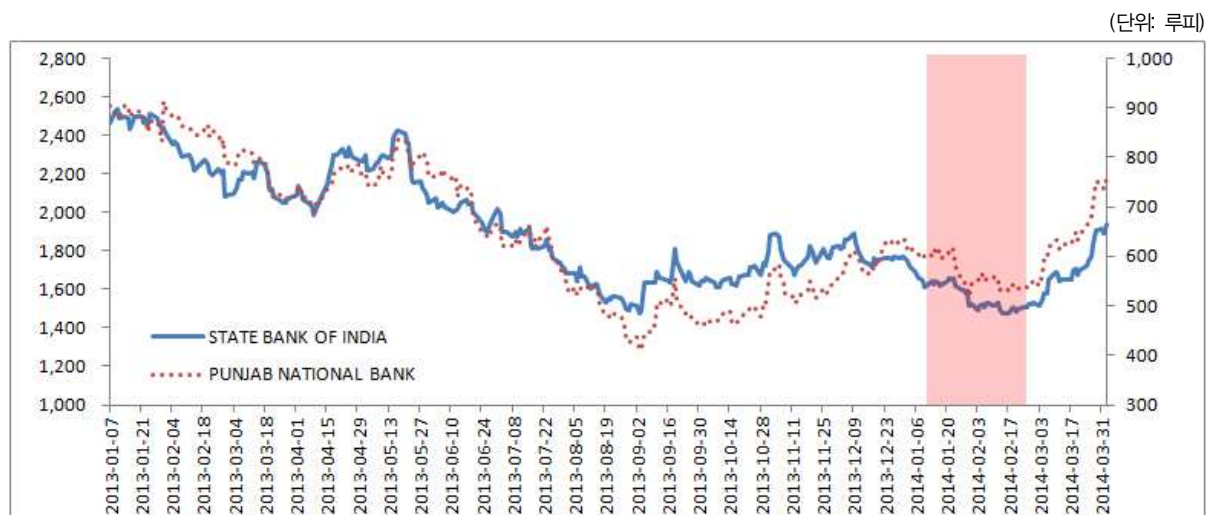
3. 평가 및 전망

가. 평가

■ 이번 인도 중앙은행의 조치는 인도 은행권의 부실화 확대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부실대출을 조기에 파악,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상업은행의 건전성 향상을 도모한 것은 금융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실물경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음.
- 최근 중국의 그림자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¹⁰⁾ 상황에서 인도가 발 빠르게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Non banking financial company)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부실대출 감축을 위한 인도정부의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최근 하락세에 있던 주요 국영은행들의 주가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음.

그림 13. 최근 인도 주요 국영은행 주가 추이



주: 음영은 중앙은행의 부실대출 감축관련 정책 발표 시기임.

자료: Thomson Datastream.

■ 한편 부실대출의 대부분이 국영은행에서 발생한 만큼 향후 국영은행에 대한 대출관리 강화와 함께 민영은행의 대출비중 제고 등 부실대출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경감시키는 조치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임.

- 인도 중앙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08~12년 전체 부실대출에서 국영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약 73%인 데 비해 민간은행 23%, 외국은행은 4%로 매우 낮게 나타남.¹¹⁾

10) "China faces difficult task in trying to reduce risks of shadow banking," *The Japan News*(March 23, 2014).

- 인도 국영은행 대출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소규모산업, 농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민간은행보다 경기변동에 따른 대출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나. 전망

■ 단기적으로는 부실대출이 증가할 전망

- 최근 경기둔화 및 인프라 사업 추진 지연, 기업실적 악화 등의 문제가 단기간에 개선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단기적으로는 부실대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인도은행의 부실대출 및 구조조정대출 규모가 2015년 3월까지 전체 대출의 약 14%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함.
- 또한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통화정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당분간 고금리 지속에 따른 부실대출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중앙은행의 관리감독 강화 및 자금지원, 개별 은행의 부실대출 처리 가속화로 부실화 확대추세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조치는 중장기적으로 은행의 자산관리능력 강화와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주요 국영은행을 중심으로 부실대출 처분을 위한 자구노력이 구체화되고 있음.¹²⁾
 - 인도은행들은 3월 중 1,000억 루피에 이르는 부실채권을 자산구조조정전문회사(ARC)에 처분함.¹³⁾
- 인도정부는 새로운 회계연도(2014년 3월~2015년 3월)에 인도 국영은행에 약 18억 달러의 자금을 공급하여 부실대출에 대비하기 위한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할 계획임.¹⁴⁾
 - 무디스는 인도은행들이 부실대출 증가 대응과 Basel III 기준 충족을 위해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인도정부가 자본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¹⁵⁾
 - 한편 인도정부는 Basel III 시행 기한을 기존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로 연장하여 은행들의 자기자본 확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줌.¹⁶⁾

11) Shashidhar M. Lokare(2014), "Re-emerging Stress in the Asset Quality of Indian Banks: Macro-Financial Linkage," p. 28.

12) 약 40개 은행의 총 부실채권 처분(경매) 규모는 약 4,280억 루피로 지난 분기의 네 배에 달함.

13) "Banks sell Rs 10,000 crore of bad loans to ARCs in March," *The Economic Times*(April 14, 2014).

14)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부실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의미하며, Basel III 기준으로 최소 8% 이상을 유지해야 함(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비율} (Tier I + Tier II)}{\text{위험가중자산}} \times 100$). 한편 자기자본비율은 기본자본(core capital)인

Tier I과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인 Tier II로 구분되며, Basel III 기준으로 기본자본(Tier I) 비율은 6% 이상이어야 함. 특히 Basel III는 기본자본(Tier I) 비율 산정에 있어 후순위채와 같이 순수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의 비중은 축소하고 보통주의 비중을 높여 자본구분 기준을 보다 강화함.

15) 무디스는 인도은행들이 2015년 3월까지 자기자본비율을 8%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약 41~58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

16) "Basel-III norms extension provides breather to public sector banks: ICRA," *The Times of India*(Mar 31, 2014).

■ 향후 경기회복 및 물가상승 압력 완화 등 거시경제여건이 개선되고 금리인하가 시행된다면 부실대출 증가추세가 빠르게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 2014년 2월 IMF는 인도의 인프라 사업 승인 지연,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해외자금이탈 위험성 등으로 인해 2013/14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4.6%에 그치지만, 2014/15년에는 5.4%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식료품, 연료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4년 2월 최근 2년 중 가장 낮은 8.1%까지 하락함에 따라 향후 통화정책당국이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함.¹⁷⁾ KIEP

17) “RBI to keep rates on hold next week as inflation eases: Poll,” *The Economic Times*(March 27, 2014).